

2011년 수탁 7급 지방자치론

0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무
-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④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정답) ①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르면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다.

②, ③, ④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p.736

02. 지방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된다. 시·군세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득세
- ② 지방소득세
- ③ 자동차세
- ④ 담배소비세

(정답) ①

(해설) ① [×]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세, 도세에 해당한다.

②, ③, ④ [○] 시·군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다.

※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체계

구 분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도 세	시·군세
지방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참고) compass 행정학 p.776

03.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사무감사권
- ② 재의요구권
- ③ 선결처분권
- ④ 대집행권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상호 견제권은 의회의 임시회 소집요구권, 의회 부의 안건의 공포권, 의안 및 예산안 발의권, 조례의 공포권, 재의요구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이 있으며,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상호 견제권은 행정감사 및 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④ [×] 대집행권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상급기관이 하급 지자체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p.753

04. 지방분권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성 비율
- ③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원의 배분비율

(정답) ③

(해설) ① [○] 국가 직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많을수록 중앙집권성이 강하다.

② [○]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중 위임사무의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집권성이 강하다.

③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형태는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기관구성의 형태만을 보고 지방분권 수준을 측정할 수는 없다.

④ [○]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상대적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집권성이 강하다.

(참고) compass 행정학 p.716

05.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행정구역 및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구가 아닌 구에는 읍·면·동을 둘 수 있다.
- ② 광역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군을 둘 수 있다.
- ③ 기초자치단체인 군에는 행정계층으로서 읍·면을 둘 수 있다.
- ④ 우리나라 자치계층구조는 예외 없이 중층제로 되어 있다.

(정답) ④

- (해설) ① [○] 자치구 아닌 구(행정구)에는 읍·면·동을 둘 수 있다.
 ② [○] 광역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로서 군이나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 기초자치단체인 군에는 행정계층으로서 읍·면을 둘 수 있다.
 ④ [x]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로 되어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p.277

06.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법체계와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와 관련된 최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규범형식에는 조례와 행정규칙이 있다.
- ③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 (해설) ① [x]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와 관련된 최상위법은 헌법이다.
 ② [x]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규범형식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상 입법행위를 말한다.
 ③ [x]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④ [○] 원칙적으로 조례의 효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한정된다.

07.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둘 수 있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답) ③

- (해설) ① [○]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시,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③ [x]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④ [○]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08. 현행 「지방자치법」 상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 ② 시·도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도·지사
- ③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
- ④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정답) ④

- (해설) ① [○]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x] 지방의회의 재의결한 사항에 대한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재의요구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할 수 있지만,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참고) compass 행정학 p.806, 807

09.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 ②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 ③ 주민소환제도
-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답) ④

(해설) ① [○], ② [○], ③ [○]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제도에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제도,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있다.

④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p.641 p.761

10.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의 중요 사무는 지방의회가 의결한다.
- ③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정답) ②

(해설) ① [○]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조합회의(의결기관)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집행기관)을 둔다.

② [×]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③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참고) compass 행정학 p.823

11.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행정감사 및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감사는 시·도의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 ② 행정감사는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해야 한다.
- ③ 행정조사는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④ 행정조사는 실시 시기에 제한이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 행정감사 기간에 대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개정되어 시·도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14일로 확대되었다. 시·군·자치구의 경우 7일에서 9일로 확대되었다.

② [○] 행정감사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행한다.

③ [×] 행정조사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실시한다.

④ [○] 행정조사는 실시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참고) compass 행정학 p.748

12. 주민참여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정책 순응의 확보와 주민 자원의 활용
- ②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 제고
- ③ 행정과정 상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책임의 명확화
- ④ 대의정치의 한계 보완

(정답) ③

(해설) ① [○] 참여한 주민들의 정책 협조로 지방정책 순응확보와 주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 주민과 행정의 협조가 증진되며, 상호(주민-주민, 주민-행정) 정보교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③ [×] 주민참여는 자칫 행정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 전가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④ [○] 주민참여는 대의제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p.758

13. 사무배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포괄적 배분방식은 사무자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없이 사무처리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 ② 포괄적 배분방식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쉽다.
- ③ 우리나라는 사무배분방식으로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④ 포괄적 배분방식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무영역을 침범하기 어렵다.

(정답) ④

(해설) ① [○] 포괄적 수권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구별 없이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 포괄적 배분방식은 운영상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 우리나라는 사무배분방식으로 절충적 수권방식인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x] 포괄적 배분방식에서는 계층 간 사무배분의 불명확하고, 개별법률로써 중앙정부 및 상급단체에 의한 무제한적 통제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 compass p.735

14.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이 구분한 주민참여의 8단계 모형에서 주민이 권력을 갖는 실질적 참여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주민통제(citizen control)
② 상담(consultation)
③ 권한위임(delegated power)
④ 협동관계(partnership)

(정답) ②

(해설) 주민이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 참여하는 단계는 대등협력(협동관계), 권한위양(권한위임), 자주관리(주민통제)이다.

② [x] 상담은 형식적 참여의 수준이 이뤄지는 단계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p.760

1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 시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시정
③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최저 표준 수준 보장
④ 지방재 발행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강화

(정답) ④

(해설) ① [○], ②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단체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자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불균형을,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수평적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③ [○]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충해 줌으로써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다.

④ [x] 지방재의 발행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아니다.

(참고) compass p.783

16. 광역행정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역연합
② 사무위탁
③ 행정협의회
④ 지방자치단체조합

(정답) ①

(해설) ① [x] 연합방식은 우리나라의 법령상 정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방식이다.

② [○], ③ [○], ④ [○] 우리나라의 법규상 인정되고 있는 광역행정방식에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있다.

※ 법규상 정규적 광역행정방식

지방자치법	① 사무위탁, ② 행정협의회,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지방공기업법	① 기업조합, ② 공동기업체

(참고) compass p.821

1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경찰의 사무 중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무도 있다.
② 치안행정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
③ 치안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경찰단장이 겸한다.
④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 자치경찰사무에는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등의 사무가 있다.(제주특별자치법 제108조)

② [○] 제주자치도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제113조)

③ [x] 치안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114조)

④ [○]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제107조)

18.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체제의 적정화
- ②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 ③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및 기능분산
- ④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정답) ③

(해설) ① [○], ② [○], ③ [×], ④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의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체제의 적정화
- 2.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19.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②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③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 ④ 헌법재판소

(정답) ①

(해설) ① [×]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제도가 아니라, 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제도이다.

②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 중 하나이다.

③ [○], ④ [○]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제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위원회, 헌법재판소(권한쟁의조정),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회 등이 있다.

(참고) compass p. 814

20. 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 산정 지표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단체별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 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파악하고 있다.
- ③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않아 재정력 파악이 곤란하다.
- ④ 지방채는 자주재원에 포함되기도 했다.

(정답) ②

(해설) ① [○] 지방재정자립도는 총재정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고 비율만을 나타낸다.

②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총액 가운데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③ [○] 재정자립도는 경상비 지출비중 등 세출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고려하지 못한다.

④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담보로 발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에 의해 상환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자주재원이 아니지만, 결국 자주재원으로 귀착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원리상 자주재원을 기본으로 한다는 주장이 있다.